

취재요청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5월 2일(화)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조은석 정책국장 (010-5314-7754)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

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불

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리 교 바시 |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
| 대표발언 |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 |
| 투쟁발언1 | 강한수 |
| -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현실 |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 투쟁발언2 - 국제건설목공노련 건설노조 탄압 중단 국제 행동의 날 소개 및 연대사 | 아폴리나 톨렌티노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주요 내용 설명 | 정기호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
| *기자회견 종료 후 인권위에 의견요청서 접수 예정 | |

■취지

-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맺은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타임오프 제공을 공갈로 보아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시 하고 있음.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따른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수사하는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

심지어 국토부는 건설사들에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서에 건설노조의 간부의 신체적 특징과 함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범사회적인 압박이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한 정책의견을 요청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채용절차법, 형법을 동원하여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가맹조직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과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규탄함.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WI) 소개 (https://www.bwint.org/)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은 건물, 건축 자재, 목 재, 임업 및 동맹 부문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글로벌 노동조합 연맹이다.

BWI는 117개국에서 약 1,2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약 351개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 사무소 및 프로젝트 사무소는 파나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인도, 부르키나파소, 케냐 및 브라질에 있다.

BWI는 전 세계적 노동조합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BWI는 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EFBWW), 북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NFBWW), 국제노조연맹(ITUC), 글로벌노조연맹(GUF)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갖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 계약자 협회 연합(CICA)과 같은 국제 고용주 조직과 세계은행(WB) 및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앰벳 유손 사무총장은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맞추어 ADB의 지원을 받는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기자회견문

유석열 대통령.

- "건폭(建暴) 같은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 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
-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자 노동자 빨대"
- "노조의 탈을 쓰고 돈을 뜯어가는 약탈 집단"
-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전임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고 현장의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를 협박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조폭", "경제에 기생하는 독", "약탈집단", "기생충"

누구의 입이 더 깨끗하지 않은 지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낸 이 말들이 여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 말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애초 최소 25개월이 걸리는 공사 기간을 14개월로 잡은 불가능한 계획을 두고 개교가 지연되었다고 한 것이나, 현행법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돈을 뜯는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기생충, 약탈 집단, 독버섯. 저 입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통해 건설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면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말들에 호응이라도 하듯,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집회와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을 협박으로 몰아 건설노조의 활동을 강요죄, 공갈죄 등의 범죄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을 배 포하여 고발을 종용하는가 하면, 혐의사실을 특정도 하지 않고 노조활동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겠다면서 건설노조 간부들을 참고인, 피혐의자라는 이름으로 소환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커질대로 커져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혐오표현이 바로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조작수사와 재판으로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건설현장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신고 양식과 함께 배포된 이 공 문에는 중점적으로 신고해야 할 악명 높은 노조의 예시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꽁지머리", "안산", "부울경" 같은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부 공문서에서 '꽁지머리"와 같이 특정 간부의 신체적 특성을 꼬집어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중점적으로 신고할 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상 종용하는 일을 대낮에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 전 조치를 요구한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건설 업체들은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대상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긴 시간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 결국 건설노조가 각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고용 관련 교섭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건설현장 전반의 노동조건의 저하를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 말들은 노동조건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잔인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를 위축시키며,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89호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피해자에게 심적 피해만 끼치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고 그 구성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해 결과적으로 건설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실제로 위와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민주노총의 행진로를 따라 듣기에도 힘든 혐오 표 현을 줄기차게 쏟아내던 이들은 혐오표현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에 기반한 사회적 압박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 적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건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날선 말과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법 적용은 노가다라 불리며 천대 받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거나, 불법과 편법을 물 흐르듯 넘나드는 건설사들의 책임 회피를 막는 대신, 두 아이의 아버지인 한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찾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 드린다.

5월 3일,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경찰 당국이 고소(발)를 사주(고소 내용까지 작성한 자료 배포)하는 사례

- 아래 피해신고서(고발장 양식과 동일) 양식을 건설현장마다 경찰관들이 배포
- 실제 교섭 당시 협박 등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
- 필요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
- 단지 진술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회사명 | 00건설, 담당자 000,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The same of the sa | 채용강요. 월레비 등 요구한 노조원 성명, 전화번호 |
| 노조원 | 명함에 적혀 있는 직책 등(조직도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
| 본사 담당 | - 업체 담당자 상무, 전무 등 성명 연락처 |
| 현장 당당 | - 현장 당당자 소장 등. 성명 연락처 |
| 노동조합원 세용현망 | 예) 민주노총 형물 1팀 20명, 시스템 14명, 해체 10명, 정리 10명 |
| 전임비, 복지비 | 1. 현장내 타워 크레인 민주노총 2대, 한국노총 1대 배치중. 월레비 목 |
| 발전기금 | 적으로 1대당 450만 원 지급 중(지급내역 첨부) |
| 명목으로 지급한 | 2. 민주노총 복지비 등으로 월 30만 원 지급 |
| 내역 | 거래내역이 있으시면 청부해주시고, 월 별로 얼마를 줬는지 작성해 |
| 300 | 주십시오 - 2022. 6. 경 현장 개설과정에서 수시로 민주노총 교섭위원 000, 000 |
| | 등이 찾아와 채용 강요를 요구하고, 2022, 7, 것 형품 1개 팀을 먼 |
| - | 저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지부에서는 형틀 공정은 70% |
| | 이상, 시스템 100%, 해제 100%, 정리 50% 작업 구간을 설정하여 |
| | 채용한다고 하며 만약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길로 가게 될 |
| | 것이라고 하며 채용을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노조원을 채용할 수 밖 |
| | 에 없었음 |
| 채용강요 및 공사 | - 민주노총 노조원을 채용할 경우 일반팀 공사진행 생산성 보다 현저 |
| 진행 상황 | 히 떨어지고 수시로 교섭위원 및 조직부장을 통해 일부 팀 교체도 |
| | 요구하고 있는 등 현장 운영에 있어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고, |
| | 회사의 존립 여부가 걸려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 임. |
| | - 또한 복지비, 월레비 명목으로 2022. 1. ~ 2022. 12. 까지 월 00만 |
| | 원을 요구하여 계좌 이제 해주었음 |
| | ● 에를 들어 채용강요나 월레비를 달라고 할 때 "당신들 어려운 길로 |
| | 가지 마라, 채용안하면 집회 하겠다" 등등 노조원들이 검을 준 내 |
| 01 20 20 20 | 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수노총 채용 명단, 공사진행 사진, 노조원과의 통화녹음파일, 문자에 |
| 입증자료 | 시지 내용 등 |
| 기타 | |
| | |
| | 2022. 12. 26 |

2.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없이 소환 조사

- 출석요구서에 보면 구체적인 협박 등에 관한 혐의사실도 없이 '노조 활동 방법, 노조원 채용 조건, 순서,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한다고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 전형 적인 투망식 수사이고 사건 만들기 수사
-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특정(일시, 장소,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도 없이 소환을 하는 사례가 있는가?

출석요구서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위한 노조 활동과 관련된 입건전조사 사건(2023-2163)에 대하여 귀하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3. 3. 30. 14:00경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할 사항 >

- 노조 활동 방법, 노조원 채용 조건·순서·규모 등 소속 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1계4팀(☎ 02-700-1417)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편리한 매체 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3. 28.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황 진



3. 유례가 없는 국토교통부 공문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9일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 상 현장 추천〉 요청을 보내 '악명높은 노조 간부' 등을 신고해달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 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 안내문 발송
-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부 공문서에서 '꽁지머리"와 같이 특정 간부의 신체적 특성을 꼬집어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중점적으로 신고할 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상 종용하는 일을 대낮에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23.3.9.(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

□ 조사경위

- o 타워크레인 월례비 및 기타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가 심각한 건설현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 협조 및 관계기관 대용체계 구축
 - 장관님께서 직접 경찰청장을 만나 건설노조의 강도 높은 수사 요청하고자 함

□ 협조내용

-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제일 큰 건설업체
 및 유형별 피해규모 현황
 - 경찰청에 기 신고된 현장과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도 포함되어도 됨
 - 피해금액 및 유형별 항목으로 작성 → 상위 10개 건설업체
- o 경찰청 및 지방국토청에 **수사의뢰 되지 않은 건설현장** 중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업체 및 유형별 피해규모 현황
 - 실태조사 이후 접수된 현장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현장명과 제보자 익명신고 가능함
 - 피해금액 및 유형별 항목으로 작성 → 상위 10개 건설업체
- o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악명높은 노조)이 심각한 노동조합 단체명과 악명높은 노조간부 및 조합원 현황
 - 예) 서경인→ 꽁지머리 안산 부율경 등
 - 권역별로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조명칭 및 조합원 순으로 작성

4. 노조 약화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영장청구서

- 검찰은 한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며, 영장 청구의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세 가지뿐임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건설노조의 견제 필요성'을 영장 발부가 필요한 사유로 명시
- 혐오 표현은 한편으로는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사건 만들기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울산지방검찰청 제2022-650호 구속영장청구 문서 중 발췌

또한, 커질대로 커져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어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추가 여죄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커져만 가는 건설 노조를 등에 업고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로 추가 피해 상황들이 속출하게 될 것 이므로 우리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